

김성환 “수입수소·국내석탄 혼소 중단… 그린수소 생산 집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노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혼소 구조, 사업종료 시점 계속 밀려 2040 석탄발전 제로화 정책 이행

공공 온실가스 감축, 민간보다 저조 온실가스감출인지 예산제도 강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9일 해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국내로 들여와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는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제로화)하겠다는 국가 기후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해외 수입 예산을 절감해 국내 그린수소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 예산을 전액



(왼쪽부터)김영훈 고용노동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불용한 이유를 묻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청정수소 입찰제도에 따라 해외에서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를 들여와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혼소하는 사업 구조를 구상했으나, 3년의 준비 기간을 거

쳐 15년 동안 운영하면 사업 종료 시점이 2044년, 2045년으로 밀리게 된다”며 “이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제로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데 예산

을 쓰기보다 국내에서 그린수소를 대규모로 생산하고 가격을 빠르게 낮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국내 R&D 중심 전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민간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 수습을 약속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목표 관리 대상기관의 목표 달성률은 66.2%로 전년(69.2%) 대비 3.0%포인트 하락했으며, 민간사업장 달성률(84.9%)을 크게 밑돌았다.

김 장관은 “공공이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전체 예산의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이다 소 형식적으로 이뤄진 만큼, 정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보다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출인지 예산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해 세출 예산현액 22조 3758억원 중 94.9%인 21조 2418억원을 집행했다. 분야별로는 ‘기후재난 대응 및

안전한 물관리’에 가장 많은 7조 4000억원이 투입됐으며, 기후·대기 분야 4조 9000억원, 에너지 분야 2조 7000억원, 순환경제·녹색산업 1조 2000억원 등 순이다.

전체 불용액(1조 516억원) 중 약 80%(8294억원)가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집중된 점도 논란이 됐다. 특히 국회가 증액한 개인 승용 전기차 보조금 예산 중 1223억원이 불용 처리된데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증액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나해에는 여러 가지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많이 늘어난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잘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하반기 반도체 업종 고용 5% 늘어날 듯”

고용원 ‘하반기 주요업종 일자리 전망’ 조선업 3000명, 2.7% 늘어날 예정 섬유업, 수출 감소 전망… 5000명 ↓

올해 하반기 반도체와 조선 업종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1%, 2.7%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반면 섬유 업종 고용은 3%대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종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반도체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8000명(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반도체 시장은 AI 서버,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및 메모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작년 하반기(8331억 달러) 대비 94% 급증한 1조6173억 달러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확대와 첨단 공정 중심의 설비투자 증가로 인해 17% 늘어난 2375억 달러 투자가 예상된다.

조선업 고용 역시 3000명(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 기준 국내 조선소는 3850만CGT의 안정적 수주잔량을 유지하며 약 3년치 이상에 해당하는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선박류 수출은 지난해 대비 8.3% 늘어난 339억 1000만 달러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올해 하반기 섬유업의 고용 규모는 5000명(-3.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소재 확대, 중동발 공급망 충격과 미국발 통상 규제, 중국의 저가 공세 등 강력한 하방 리스크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생산은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

저효과와 첨단소재 신증설 효과로 늘지만, 중동발 공급망 충격과 범용부문의 경쟁력 약화가 성장을 제약하며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 기계, 전자·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 금속가공, 석유·화학은 전년동기의 고용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계 + 0.8%, 전자·디스플레이 -0.1%, 철강 -0.3%, 자동차 -0.5%, 금속가공 -0.3%, 석유·화학 -0.6% 등이다.

이 보고서의 분석 대상은 기계, 조선, 전자·디스플레이,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국내 9개 주력 제조업종이다.

고용정보원은 전년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로 분류한다. -1.5%~1.5%는 ‘유지’, -1.5% 미만은 ‘감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무보, 수출기업 채권추심 수수료 50% 감면

중재원, 무보 대행 서비스 추천 ‘맞손’ 무역분쟁 예방·대응 위한 교육 진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함께 해외 채권 미회수와 무역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무보는 1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중재원과 ‘수출기업 채권추심 지원 및 무역분쟁 해결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해외 대금 미회수 위험이 늘어남에 따라, 무역분쟁 해결과 채권 회수를 연계해 한층 강화된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중재원은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하는 기업 중 해외채권 회수가 필요한 곳에 무보의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추천하게 된다. 무보는 해당 추천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신현운 대한상사중재원 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보

기업을 대상으로 추심대행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양기관은 수출기업의 무역분쟁 예방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협력 사업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 ‘4조 달러 시장’ 인도와 CEPA 개선협상 속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오는 21일까지 서울서 개선협상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등 협의

정부가 세계 최대 인구나 국내총생산(GDP) 4조 달러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는 인도 시장과의 교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는 한-인도 CEPA 제13차 개선협상이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2차 협상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2016년 개시 이후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잠정 중단됐으나,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물꼬를 텄다. 이번 협상에는 이민영 산업부 통상협정교섭관대리와 인도 상공부 카필 초드리(Kapil Chaudhary)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 정부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이민영 산업통상부 통상협정교섭관(대리)은 1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카필 초드리(Kapil Chaudhary) 인도 상공부 국장을 비롯한 양국 협상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3차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참석해 상품·서비스·원산지·무역기술장벽·공급망·산업협력 등의 분야를 논의했다. /산업부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서비스 시장개방과 원산지 기준 관련 상호 규제적 관심 분야와 개방 가능성을 타진한다. 아울러 공급망, 전략적 산업협력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과 분과위원회 구성 등도 함께 협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신흥시장이지만,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 규모는 256억 달러로 유사한 경제 규모인 아세안(ASEAN)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개선협상을 통해 전통적인 시장개방은 물론 양국 간 공급망과 산업협력을 포괄하는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부산항만공, 부산항 북항 경관수로 새 단장

특수장비 활용 수초·부유쓰레기 수거

부산항만공사가 실시한 환경정비·수질 관리에 힘입어 부산항 북항 경관수로(별빛수로)의 미관 및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그동안 별빛수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장비를 활용한 수초 제거와 부유쓰레기 수거를 시행해 왔다. 특히 수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를 막기 위한 부유식 쓰레기 차단막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환경관리를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DIN(용존무기질소), DIP(용존무기인), DO(용존산소) 포화도가 각각 지난해 대비 66%, 71%, 20% 개선됐다. 해수수질평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약 30% 향상된 것이다.

해양수질평가 전문업체의 평가도 나왔다. 업체 관계자는 “주요 수질지표의 변화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간 진행한 지속적인 환경개선 조치가 경관수로 수질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초와 부유쓰레기 수거, 외부 오염원 유입 관리 등 현장 중심의 환경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원도심 배후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유입에 대한 부산시 주관의 분류식 관거 사업(생활하수와 빗물을 따로 분리해 처리)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환경개선 노력이 경관수로의 수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북항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경관수로를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